

尹 “공무원들 호우때 앓아 있지만 말고 현장 나가라”

유럽순방 귀국 중대본 회의 주제 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동원 지시 경북 예천 산사태 피해 현장 방문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유럽 순방 귀국 후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의 모두발언에서 “복구 작업과 재난 피해 지원 역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녹색 민방위복 차림으로 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먼저 “비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이번 폭우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상황을 모두 엄중하게 인식하고 균형을 포함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특히 구조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산사태 취약지역 등 위험 지역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사태를 키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위험 지역 진입 통제와 선제적 대피를 작년보다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재난 대응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그 지역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선제적으로 판단해 빨리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대피 시켜야 하고, 교통 통제, 출입 통제를 시켜서 위험 지역으로는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인명 피해를 막는 기본 원칙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이번 순방 일정 중에 실시간으로 호우 피해 상황과 대응 조치를 보고받았고,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현지에서 화상회의와 우선 지시를

통해서 총력 대응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이런 기상이변은 늘 일상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늘 있는 것으로 알고 대처해야지, 이상 현상이니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인식은 완전히 뜯고쳐야 한다”며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회의에서도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인명 피해를 막고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국민 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집중호우가 올 때 사무실에 앉아만 있지 말고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둘러보고 미리미리 대처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기상청 및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피해 현황과 대처 상황을 보고 받고 추가적인 인명피해 방지와 이재민 지원을 거듭 당부했다.

위험지역 통제와 관련해 경찰, 지자체, 소방 공조를 강조하며 “경찰이 일원화된 체계를 가지고 중심을 잡고 교통 통제와 위험지역 통제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또 농식품부에는 농가 피해 상황과 통계를 챙겨볼 것을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종섭 국방부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한상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 유희동 기상청장 등이 자리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17개 시도 지자체장도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이번 집중호우로 산사태 등이 발생한 경상북도 예천군 일대를 찾아 수해 상황을 살피었다. 이날 새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 대통령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집중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뒤 곧바로 예천으로 향했다. 윤 대통령은 산사태 현장을 살펴보고 김학동 예천군수 등으로부터 피해 상황 등을 보고 받았다. 이날 방문에는 이진복 국무수석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진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동행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경북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를 찾아 산사태 피해 현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거야 입법 폭주” vs “국회 기능 훼손”... 여야, 제헌절 법률안 처리 공방

여야는 75주년 제헌절인 17일에도 법률안 처리를 둘러싸고 비난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의 단독 법안 처리 등을 ‘입법 폭주’로 규정하고, 이를 강하게 비난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제헌절을 맞아 헌법 정신을 잘 계승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면 마음이 편치 못하다”며 “최근 법치주의가 유린당하고, 헌법에 대한 존중이 많이 훼손됐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입법부인 국회에서조차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사례들이 왕왕 발생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이는 특정 집단만의 책임이 아닌 정치인 모두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범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최근 국회에서

는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로 헌법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의회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대화와 타협의 정신이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잇따른 거부권 행사 등을 염두에 둔 듯 여권을 향해 헌법을 존중하는 정신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년간 국민의 기본권과 행복, 존엄성이 위협받았다”며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 기능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집요히 이뤄졌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반도 평화를 외면하고, 양극화와 불평등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국민통합에 노력하지 않는 것도 헌법 정신에 충실하지 못

한 태도”라며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헌법 앞에 겸허하고, 국정운영 기초를 헌법에서 찾으라”고 했다.

권철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현 정부 들어 무분별한 시행령 통치 등으로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가 무너지고, 언론 등 표현의 자유 침해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약화됐다”며 “국민 통제 수단으로 전락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전 본관 로텐더룸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노태우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장과 전직 국회의장 등을 초청한 가운데 제헌절 경축식을 개최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윤 대통령 지지율 38.1%...2주 연속 하락

리얼미터...국힘 37%·민주 44%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의뢰로 지난 10~14일 닷새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0%포인트(p) 떨어진 38.1%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6월 셋째주부터 상승해 6월 다섯째주 42.0%까지 올랐으나 7월 첫째주 들어 하락세로 전환했고, 이번 조사에서 2주 연속 하락을 기록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0.9%p 상승한 58.9%로 2주 연속 올랐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대구·경북(5.7%p ↑), 70대 이상(5.3%p ↑), 무직/퇴/기

타(3.7%p ↑), 학생(5.8%p ↑) 등에서 상승했다. 반대로 부정 평가는 광주·전라(4.4%p ↑), 부산·울산·경남(3.9%p ↑), 60대(4.0%p ↑), 50대(3.0%p ↑) 등에서 주로 올랐다.

리얼미터는 이번 조사 기간 주요 이슈로 윤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논란을 꼽았다.

격주 단위로 조사하는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직전 조사(6월 19~23일)보다 1.0%p 내린 37.0%, 더불어민주당은 0.4%p 오른 44.2%를 각각 기록했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종전 5.8%p에서 7.2%p로 벌어졌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p다. 조사는 무선(97%)·유선(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1%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영아 살해유기 처벌강화’ 개정안 법사위 통과

오늘 본회의 상정 처리

법정 최고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 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한 처벌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강화하는 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영아살해죄·영아유기죄 관련 규정은 6·25 직후인 1953년 9월 형법이 제정될 당시 처음 만들어져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당시에는 각종 질병 등으로 일찍 사망하는 영아가 많아 출생신고도 늦고, 영아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지금과는 큰 차이가 있었던 만큼 법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사신 사건’ 등 관련 범죄가 잇따르면서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

현행 형법상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반면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일반 유기죄와 존속 유기죄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5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영아 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친다. 해당 개정안은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심의제 제230620-중-154988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개원21년의 **첨단우리병원**에서 **건강과 행복을** 챙기세요!

대상포진 **폐렴백신** **영양수액**

백신 냉장고 도입

첨단우리병원 전화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전원 리모델링 **칼라강판 지붕공사**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징크판넬시공 **창호(삿시)교체** **농막** **옥상스틸방수**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